

공감

2022. 02.14~20

641 호

gonggam.korea.kr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BEIJING 2022



함께 해냈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주요사항

구 분		현 행	조정안 (2.9. 시행)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일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미완료자) 10일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시)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다른 삶이 있을 뿐



● 우희덕 코미디 소설가

장편소설 <러블로그>로 제14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벗어나 본 적 없는
도시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제주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 겉모습에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 사안을 놓고 전혀 다른 말을 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제주로 이주한 것을 두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 편한 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왜 제주로 내려갔냐고 말한다. 그것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 마을로. 누군가에게 나는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된 이해 못할 사람일 뿐이다.

반면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이른 퇴사와 제주 이주, 소설가로서 삶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내 통장 잔액을 보면 해당 발언을 즉시 철회하겠지만 차치하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제주의 삶이 그만큼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다. 나 스스로도 선불리 판단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한 삶이 생각대로 흘러갈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다른 삶이 있을 뿐이라는 것. 사람이 모두 다른 만큼, 다른 삶이 있을 뿐이라는 것. 타인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틀린 삶은 없다.

제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일단 개인주의 성향인 내가 녀살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지금은 이웃 할머니 집에 먼저 찾아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고 옆집 아저씨에게는 먹거리들을 나눠드린다. 제주 방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마을 이장님과도 통역 없이 소통하며 질문을 구한다.

근검절약은 차원이 달라졌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고 퇴사한 내가 생존하려면 아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제주의 겨울은 생각 외로 춥다. 바람이 심하고 습도도 높다. 남쪽의 파스함을 만끽하며 살 줄 알았는데 내 몸은 늘 냉랭한 상태다. 분명 제주인데 밤에는 강원도 전방 지역보다 더 춥다. 보일러를 마음껏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주의 가스비는 가히 공포에 가깝다. 체감적으로 수도권 도시가스보다 2~3배 비싸다. 얼어 죽든지 맘 놓고 때서 죽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무엇보다 먹는 것이 달라졌다. 음식은 절대 남기지 않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또 흑돼지 구이와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던 내가 제주 돼지의 사육 실태와 악취 문제를 목도한 이후로는 돼지를 먹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의 엄청난 변화다. 생명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제주에 온 이후로 시계를 잘 보지 않는다. 날짜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것이 도시에 있을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내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더 크게 변화하고 싶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올바른 삶이나 틀린 삶이 아닌 다른 삶이 있을 뿐이라는 것. ◎



나의 계절은 언제일까? 겨울에 열매를 맺게 될까? 집 뒤뜰 귤나무 | 우희덕





“스포츠권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요”

스포츠기본법이 2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받는다. 2월 10일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휠체어컬링 경기가 열리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포인팅용체

2022. 02.14-20

641호

우희덕의 제주 표류기

- 01 다른 삶이 있을 뿐

공감 포토

- 02 “스포츠권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요”

국정종합

- 06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대 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힘내라 대한민국

- 08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재택치료 관찰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방역체계 개편
12 부모 밀접접촉자여도 검사 음성이면 등교



14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 14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17 황희 장관 베이징서 광폭 ‘스포츠 외교’ 행보

2050 탄소중립

- 30 폐열 활용해 연간 4000톤 온실가스 감축
34 민관 손 잡고 세계 최고 수소경제 날갯짓

홍화정 만화_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㉞

- 38 전기밥솥의 휴식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40 버려지는 불가사리로 도로 위 눈을 치운다

특별기획_맛있는 정책이야기 16

- 42 해방둥이와 MZ세대 모두 “우리가 선진국이다”

대한민국 혁신 국민이 누린다 ㉠

- 46 “안전보다 중요한 인권은 없다”
밀폐공간서도 안전하게 일하도록



표 지 이 야 기 함께 해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이 남자 1000m 준결승 편파판정 설움을 털고 제 실력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2월 9일 에이스 황대헌(23·강원도청)이 1500m 금메달을 따내며 쇼트트랙 강국임을 실력으로 입증했다. 우리 선수단 첫 금메달이다. 황대헌은 ‘평창 막내’에서 ‘베이징 에이스’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남자 피겨스케이팅 차준환(21·고려대)은 29명의 출전 선수 중 전체 5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올림픽 도전 역사를 새로 썼다.

특 집 제도 자치→생활 자치... 자치분권 2.0 시대

- 20 /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넓히고
중앙-지방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 24 / "자치분권 엄청난 변화 국민 관심·응원·지지 중요"
- 26 / 주민 사회복지 늘고 도시경쟁력 살아나고

청년이 미래다

- 49 연 9%대 금리 수준 효과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세요
- 50 청년 창업 망설여지나요?
여러분의 잠재력에 투자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문화

- 52 코로나 시대 문화 관람이 꺼려지나요?
AI 로봇과 함께 안전하게 누리세요!

연재_ 어른 그림책 보기 ② 정육점 엄마

- 55 어른은 반드시 슬프다

연재_ 안방에서 즐기는 세계의 뮤지엄 ④

루브르 박물관 ④

- 56 모나리자부터 나폴레옹, 비너스까지
역사와 신화 속에서 불러낸 이름들

연재_ 한국의 맛 ⑩ 수원화성

- 60 위기를 기회로 미래를 보다

연재_ 한국의 맛 ⑩ 우동

- 62 후후 후루룩~ 배는 든든 추위는 거뜬

64 참여공감

30



56



발행일 2022. 02.1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황희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하고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중증과 치명률이

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월 8일 “코로나19 환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대 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1년 7월 25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이날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며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환자 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환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 역량의 우수성이 심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 준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

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여야 합의로 “예결위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의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심의과정 사각지대 해소 성심껏 검토”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다”라며 추경의 빠른 통과를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면서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2월 9일 청와대에서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환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OECD 동남아프로그래(SEARP)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상황 외교적 해결 기대”

문 대통령이 2월 7일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으로부터 듣고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각각 모스크바와 워싱턴으로 향하는 등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통화는 유럽연합 측 요청으로 20분 동안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유럽연합 쪽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관련 노력을 평가하고 유럽연합 측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쇼트트랙 1500m 금 황대헌에게 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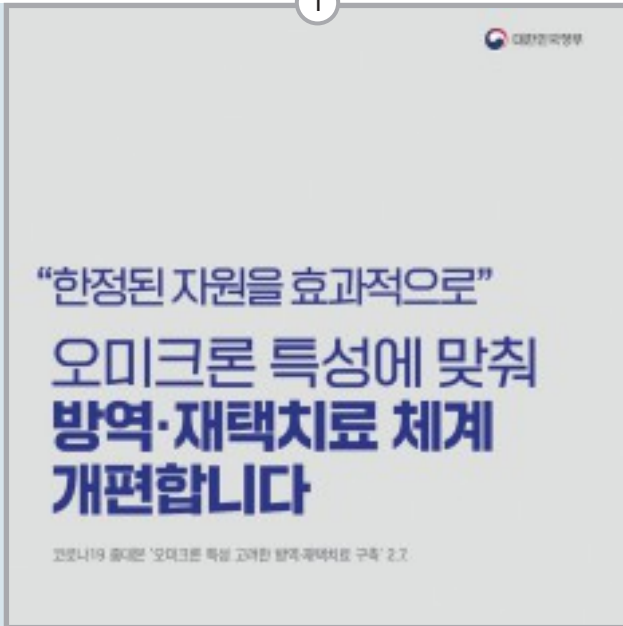
문 대통령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황대헌 선수에게 “1000m의 역을함을 한방에 날려보낸 쾌거”라고 축전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 9일 축전을 통해 “압도적인 실력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면서 “기다리던 소식에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창의 ‘겁 없는 막내’가 베이징의 ‘에이스’가 되었다. 탁월한 스피드와 순발력뿐 아니라 노련한 레이스 운영이 단연 돋보였다”면서 “쇼트트랙은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정말 고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수단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를 더욱 멋지고 늠름하게 즐겨주기 바란다”며 “자랑스러운 황 선수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다”고 축전을 마무리했다. ●

이찬영 기자

1



2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재택치료 관찰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방역체계 개편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재택치료 건강 모니터링 체계가 60세 이상 등 고위험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된다. 집중관리군은 건강모니터링을 받지만 무증상·경증인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나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건강을 살피며 필요할 때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관리군은

국민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키트는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하고 격리자 가정에 지원되던 생필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5개에서 112개까지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전담 전용병상을 지정해 응급실 내에 격리된 별도의 진료구역을 만들 계획이다.

집중관리군에 포함되는 기저질환은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포함),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 등이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 배정돼 1일 2회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모든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됐던 재택치료키트도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간소화돼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지급된다.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도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일반관리군은 국민의 자율과 협력에 기반한 체계로 조정한다.”

③ 격리방식 개편 - 1. 확진자

확진자 격리방식 개편으로 확진자 자율성 등 더욱 확보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 시마다 보건소 신고 폐지*
확진자 격리해제 시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

*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탑재한 자가격리앱(보건소 대신 고시 이행) 등
관리 체계 폐지

관련 대응인력은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
으로 전환

③ 격리방식 개편 - 2. 공동격리자

복잡하게 운영되던 동거가족 격리제도로도 대폭 간소화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필수적 목적의 외출*도 허용

* 방역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동거가족 공동격리 간소화>

-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
-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전환
- 2차 접종 후 14일 ~ 30일간격 또는 3차 접종자
-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격리로 생활수칙*** 준수
- 격리(수동감시)인 퇴원 시 PCR 검사 실시와 고온성 시 격리 해제
- *** 일상, 핵심시설을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격리
- *** (대스크(9F94) 임시복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2인당 1인 방문금지 등
- 공동격리 중 확진 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시지만 7일 격리

바뀌었다고 밝혔다.

관리 기준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금까지 환자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2월 9일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됐다.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했다. 환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2월 9일부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이와 함께 환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2월 9일부터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환자를 통해, 시설은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환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됐다.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수동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환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에서 해제되지만 이후 3일간은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 장소 방문 금지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격리에서 해제되며 환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아울러 공동격리 중 추가 환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환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위기시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 입원

이와 함께 신규 환자가 하루 5만 명 이상이 되고 병원 내 다수 의료진이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의 일부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2월 9일부터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됐다. 또 환자와 접촉했다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7

①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 실시

일반관리군 환자의 경우엔 정기적 모니터링은 없으며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

구분	기준	개편
집중관리군 (만 60세 이상, 또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일반관리군	-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

* 역학 치료제 투약 대상자: 만 60세 이상, 만 5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8

① 재택치료 키트·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키트*는 집중관리군에만 지급

소아용 키트는 많은 가정에 상비되어 있어
지자체에 별도 요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음

* 구경품 5종: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격리자 가정 지원 생필품 지급 간소화

동거가족 필수 외출 허용에 따라 직접 구입 가능
생필품 지급여부는 각 지자체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

기존 키트·생필품 보급업무 투입인력은 다른 방역 업무에 투입, 현장 인력 문제 개선

있도록 허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 (BCP)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병원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와 의료진의 격리(감염)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신규 환자 기준으로는 하루 환자 수가 7000명 이상~3만 명 미만일 때는 1단계(대비단계), 3만 명 이상~5만 명 미만일 때 2단계(대응단계), 5만 명 이상일 때 3단계(위기단계)다.

3단계에서 환자가 급증해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제조 노바백스 백신 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사의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84만 회분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이미 사용경험이 있는 방식으로 제조된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재조합단백질 백신'이다. 이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관조건은 냉장 2~8℃에서 5개월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를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해 자체 시험법을 확립하고 효소분석기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도입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 이번 84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효과성·안전성·품질을 확인했으며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찬영 기자

부모 밀접접촉자여도 검사 음성이면 등교

새 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

정부가 2022년 1학기 학사운영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해 개학 전후로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체계를 도입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 등을 반영한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해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3% 확진·15% 격리’ 맞춰 등교 방식 결정

학교 방역지침 보완과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이에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전년도 이상 수준인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등을 추진한다.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애플리케이션)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 2회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한다.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지원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 및 출근이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 및 출근이 가능하다.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해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0%를 추가적으로 구비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에는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사운영계획 수립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추진해나간다.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 수업 ▲전면원격수업 등으로 분류하고 각 지역과 학교에서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를 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인 운영 유형을 정할 시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하되 학교급별·학년별·학교규모별·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초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교사의 안내를 받으며 등교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대면수업 원칙 유지... 비상시 탄력 운영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인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대학 집중방역 점검기간을 운영,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자가검사 키트와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도 확인한다.

기숙사 내에서 환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철저한 협업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 등에는 자가검사 키트를 우선 배치한다.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도 사전에 수립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수 교육·연구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대면 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아울러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인 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해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체계와 비상계획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며 “1학기 중 정상등교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고 덧붙였다. ●

심은하 기자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황대현이 2월 9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포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쇼트트랙 남자 1500m 황대헌 우리나라 첫 금메달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이 남자 1000m 준결승 편파판정 설움을 털고 제 실력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2월 9일 황대헌(23·강원도청)이 1500m 금메달을 따내며 쇼트트랙 강국임을 실력으로 입증했다. 황대헌은 ‘평창 막내’에서 ‘베이징 에이스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황대헌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체육관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09초 219를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리 선수단 첫 금메달이다.

빙판 위의 우리나라는 강했다. 앞서 2월 7일 충격의 페널티 탈락과 부상까지 겪으며 흔들릴 법도 했지만 더욱 강해져서 돌아온 듯 보였다. 2월 8일 열린 훈련에서 최재진과 만나 “앞으로 경기가 더 있지 않나. 더 잘 먹고 잘 잤다”(황대헌) “지난 일이나 다 털어버렸다”(이준서)고 말하던 여유에는 어떤 과장도 없었다. 그야말로 실력으로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특히 이날 우리나라는 1500m 준준결승에 나선 황대헌, 이준서(22·한국체대), 박장혁(24·스포츠토토)이 모두 결승에 오르는 괴력을 과시했다. 이준서는 5위(2분 09초 622), 박장혁이 7위(2분 10초 176)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남자 1500m에 3명이 출전했지만 아무도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 건 뛰어난 실력에 기반한 강한 정신력 덕분이다. 전날 훈련에 나선 황대헌은 “결과는 아쉽지만 어찌 됐든 계속 이 벽을 두들겨서 돌파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날 작전에 대해선 “판정은 심판의 몫이다. 깨끗하게 했지만 깨끗하지 못했으니 그런 판정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한 수 배웠다”라며 “더 깔끔하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황대헌은 결승에서 마지막 8바퀴 내내 1위를 달리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앞서 열린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 두 명을 멋지게 추월하고도 페널티 판정으로 실격했던 황대헌은 이날 금메달을 목에 걸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아무도 손 못 대는 깔끔한 전략 세웠다”

황대헌은 “1000m 경기도 깔끔한 경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더 깔끔한 경기를 준비했다. 깔끔한 경기 중에 가장 깔끔하게 경기를 하는 것을 전략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계속 벽을 두드렸다. 절실하게 벽을 두드리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다.

황대헌이 두드린 벽은 단순히 편파 판정만이 아니었다. 황대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불운에 시달렸다. 그는 당시 남자 1500m 결승에서 넘어지며 메달을 놓쳤고 1000m 준준결승에서도 넘어지며 실격했다. 당시 남자 500m에서 ‘깜짝’ 은메달을 목에 걸긴 했지만 자신의 주 종목(1000m) 등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기회를 모두 놓쳤던 셈이다.

이번 베이징 대회를 앞두고도 어려움이 많았다. 중학생 때부터 겪어온 고질적인 허리 부상이 그를 괴롭혔고 코로나19로 한 시즌을 사실상 통째로 날렸다. 더욱이 쇼트트랙 대표팀은 대회 직전 각종 어려움까지 겪었다.

모든 굴곡에도 불구하고 황대헌은 그저 자신과 싸움에만 집중했다. 그는 대회를 앞두고 인터뷰 때 “나는 남들과 비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냥 나 자신을 이기는 목표를 세운다.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황대헌이 마주한 외부적인 벽에 주목할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한계라는 벽과 싸우고 있었던 셈이다. 그가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끝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이유다.

“쇼트트랙 얘기가 나오면 항상 제가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향해 그는 다시금 스케이트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황대헌은 결승에서 마지막 8바퀴 내내 1위를 달리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앞서 열린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페널티 판정으로 실격했던 황대헌은 이날 금메달을 목에 걸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차준환이 2월 10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오페라 '투란도트'의 음악에 맞춰 연기를 펼치고 있다. | 연합뉴스

남자 피겨 차준환 사상 첫 올림픽 톱5

차준환(21·고려대)이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올림픽 도전 역사를 새로 썼다. 차준환은 2월 10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프로그램에서 182.87점을 받았다. 앞서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4.30점, 예술점수(PCS) 45.21점, 총점 99.51점을 기록해 29명의 출전 선수 중 전체 4위를 기록했던 차준환은 쇼트와 프리를 합쳐 282.38점을 기록하며 전체 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피겨 남자 싱글 선수가 올림픽에서 5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차준환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기록한 15위다. 차준환은 주니어 때부터 우리나라 남자 피겨 역사를 바꿔왔다. 우리나라 남녀 통틀어 공식 대회에서 쿼드러플 점프를 처음 성공했고 주니어 세계신기록까지 작성했다. 2016~2017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남

차준환은 주니어 때부터 우리나라 남자 피겨 역사를 바꿔왔다. 우리나라 남자 싱글 선수가 올림픽에서 5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차준환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기록한 15위다.

자 피겨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땀고 시니어 데뷔 이후에는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메달을 딴 최초의 우리나라 남자 피겨 선수가 되기도 했다.

경기 후 차준환은 “만족할만한 경기였다. 첫 번째 점프에서 실수가 났는데 연습에서 완벽했던 점프라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도 남은 점프를 잘 소화했기 때문에 즐겁게 했다. 올림픽 인간극 경기하는 순간순간을 세세하게 기억하려 한 것 같은데 그런 목표는 이룬 거 같다”고 말했다.

남자 빙속 김민석, 평창 이어 1500m 또 동메달

앞서 ‘빙속 괴물’ 김민석(23·성남시청)이 우리 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사했다. 김민석은 2월 8일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1분 44초 24로 동메달을 따냈다. 김민석은 평창 대회에 이어 올림픽 두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김민석은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주인공이 됐다.

김민석은 경기 뒤 방송 인터뷰에서 “챔피언을 향해 열심히 준비했다. 긴장을 많이 했지만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칠 수 있어 만족한다. 우리 선수단의 첫 메달을 내가 딸 줄은 몰랐다. 나의 메달이 다른 선수들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준희 <한겨레> 기자

황희 장관 베이징서 광폭 ‘스포츠 외교’ 행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황 장관은 2월 5일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 등 한·중·일 3개국으로 이어지는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2022년 항저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황 장관은 2월 6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위틀드 반카 위원장을 만나 불법 약물 사용을 막고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를 만들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도핑방지기구 간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했다.

황 장관은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선수단과 대회 지원 관계자 등도 만나 격려했다. 2월 5일에는 선수단에 한

식 도시락을 지원하는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선수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 지원 인력 14명을 격려하고 선수단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문체부는 “황 장관이 엄격한 방역정책의 영향으로 현지 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도 계속 방문할 계획”이라며 “특히 중국 내에서 우리 선수단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흐 IOC 위원장 만나 문화올림픽 제안

한편 황 장관은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베이징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문화올림픽을 제안했다.

문체부는 2월 8일 황 장관이 7일 베이징에서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준비 등을 논의하면서 문화올림픽 개최 의견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중·일 3개국의 연속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자 동계스포츠 재개발국 청소년들에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렸던 만큼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서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제안한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를 한국이 받아들여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황 장관은 “전 세계가 화합·융합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올림픽을 추진한다면 문화다양성을 높이고 인류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추진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이찬영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월 7일 중국 베이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도 자치 → 생활 자치 자치분권 2.0 시대 열렸다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3일 시행됐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면개정돼 시행되는 이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효율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바야흐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각 지방이 기존의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 자치'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의 '생활 자치'로 발전하고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 지역의 자율성 발휘 및 특화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91년에 재개된 지방자치(자치분권 1.0 시대)가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 마련에 초점을 둔 시기였다면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자치분권 6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완료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재정분권 등 다양한 입법적·재정적·정책적 성과가 완성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시대가 개막됐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뒷받침할 법 시행에 맞춰 주요 내용과 그 의미, 기대 효과를 소개하고 특례시로 거듭난 현장을 살펴본다.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추진 전략	추진 계획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4차 산업혁명 특별권역 미래산업 메카 ·국가기능 특화·연계 균형발전 허브	·특별지자체 설치·운영(2024년) ·충청권 행정통합 추진(중장기)
대구·경북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 ·공항·항만 연계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특별지자체 설치·운영(2023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중장기)
광주·전남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현 ·광주 인접 5개 시·군 상생발전전략 수립 ·남해안남부권 연계 신성장축 도약	·특별지자체 설치 운영(2024년) ·이후 권역·권역, 광역·기초 협력 추진
부산·울산·경남	·기후위기 대응 선도 ·혁신기반 동반성장 ·공간 압축 초광역 인프라	·특별지자체 설치 (2022년 1분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넓히고 중앙-지방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자치분권 2.0 주요 내용과 의미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의장은 대통령이,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고 기획재정부·교

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날은 새로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이었다. 정부는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제1회 회의를 개최해 문 대통령 임기 내 '제2국무회의 도입'이라는 국민과 약속을 완수했다"며 "특히 오늘은 32년만에 대폭적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 등 문제
인정부가 그동안 자치분권 확대를 위
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날로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
했다.

중앙-지방 간 소통과 공론의 장 마련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
해 2021년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중앙
지방협력회의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중앙과 지방 사
이의 소통·협력을 제도화한 것으로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
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다.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
지방협력회의의 운영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한 국가 최고 심의 및 의사결정기구로 '중앙-지방이 상생
하는 연대와 협력의 대한민국' 비전 아래 운영한다. 그동안 비
정기적으로 이뤄져 온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정례회
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
하게 돼 있다.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
의에 공유한다. 협력회의는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
위원장제를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구조로 운영하고 구성
원이 자유롭게 안건을 제출해 상향식 공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연간 1~2회는 지역 현장에서 '(가칭)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
회의'로 개최해 지방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한다. 특히 관계기관 사이의 협업을 통해 안건을 숙의하는 과
정을 거치는 등 안전 선정 과정이 곧 중앙-지방 간 소통과 공
론의 장이 되도록 운영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와 연계해 지방 관련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기
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
화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채널은 시·
도지사협의회,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정책협의회, 지방재정부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효율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담심의원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등 다양하게 존재했
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정부와 지자체
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위
상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
임없이 제기됐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

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정례화·제도화해 대
통령이 직접 지방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력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 심의다. 회
의가 다룰 쟁점과 현안 의제의 범위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등 매우 포괄적이다.

정책 결정·집행에 주민 참여 확대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은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
량과 책임 강화,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효율 증진 등을 꾀하고 있다.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고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권
한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분권 수준을 크게 높였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목적 조항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
권을 명시했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2.0 시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주민주권 구현 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 주민자치 원리 강화 (제1조)
목적 규정에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명시
- 주민자치 권리 확대 (제17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19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

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감사청구 관련 조항이 특히 눈에 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권자 기준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 제·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포함)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는 교육 횟수·시간·내용 등이 이미 규정돼 있어 사실상 하위 법령에서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숙원도 실현됐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했다. 이들 '특례시'에는 예외적 사무 처리 권한인 특례도 둘 수 있게 했다.

자치분권 2.0 시대 본격 추진의 또 다른

촉은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다.

1월 13일부터 새로 제정·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조례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 참정권을 높였다.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 구체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출범의 발판이 될 특별지자체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구체화했다. 이 개정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는데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시행령에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사항도 담겨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는데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건 제한된다.

또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협의체를 통한 자치단체 간 자율조정기 이워진다. 경계변경 조정 신청 사유로는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리돼 있거나 도로·하천 등으로 인해 소속 자치단체와 현저히 분리돼 다른

자치권 확대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되어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자치권 보장



·사무배분 보충성의 원칙 규정 (제11조)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제28조)

법령의 범위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명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활성화됩니다.



·국가-지방간 협력 의무 (제164조)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를 신설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제186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주요 정책, 지방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 및 협의가 가능한 근거 마련

자치단체에 밀접하게 접해 있는 경우 등이 예시돼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 여러 새로운 조항을 새로 두거나 고쳐 자치권과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행정 능력이 높아지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32년 전인 1988년 전부개정법률은 자치단체 중심, 중앙-지방 상하관계 개념을 중심으로 둔 자치분권 1.0 시대를 뒷받침했다면 이번 개정법은 주민 중심, 중앙-지방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로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청구요건 완화 주민 참정권 높여

자치분권 2.0 시대 본격 추진의 또 다른 축은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다. 1월 13일부터 새로 제정·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조례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 참정권을 높였다. 지자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길이 넓어진 셈이다.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발안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 일찌감치 도입됐지만 청구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법은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대폭 낮춰 조례 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했다.

최소 동의 인원도 줄었다. 기존에는 조례 청구 동의 인원을 정할 때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2개 집단으로 분류했는데 이 법은 인구 규모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했다. 같은 광역단체라도 인구 800만 명을 기준으로 차등을 뒀고 기초단체 역시

자치분권 2.0 시대, 주요 변화 내용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1.0	자치분권 2.0
의의		지방자치의 부활 및 실시	자치분권의 고도화
특징 및 평가		·불완전한 제도 ·2할 지방자치	·제도의 정상화 ·성숙한 지방자치
주체	주체권	단체자치(자치단체가 주체)	주민자치(주민이 주체)
	주민발의	간접조례발의	직접조례발의
	직접참정요건	주민직접참정 엄격한 요건	주민직접참정 대폭 완화
	참여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자치권	근거	국민주권의 위임	주민주권에 기초
	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 (법률로 위임한 조례 행정입법으로 제한 금지)
	강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인구가 적을수록 필요한 동의 인원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조례를 청구할 때 행정기관(시·도·구·군)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광역·기초의회에 제출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조례 청구가 들어오면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조례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

조계환 기자

“자치분권 엄청난 변화 국민 관심·응원·지지 중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공감〉은 1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 2.0’ 시대가 주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과 의미 등을 들어봤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행정학자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9년 5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발의해 입법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즉 자치분권의 실질화”라며 “2020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의 법적 기반 완성으로 자율과 협력에 토대를 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가 개막됐다. 이제 주민주권 이념과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개정 내용에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특례시 지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지방자치 역량 신뢰 보여줘

역대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실행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에서 조항을 한 두 개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처럼 200여 개 조항을 한꺼번에 바꾼 건 지방분권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와 시·군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있었지만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인 자치분권 의지를 갖고 있었고 자치분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해 ‘자치분권 6법’으로 불리는 제정·개정 법률이 통

“무엇보다도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 지지가 이제 더욱 중요하다.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67) 위원장이 1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감〉과 만나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자치분권위원회

과될 수 있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보다 먼저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해 국민에게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도 지방분권 법률 제·개정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이동식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가 대표적이다. 지자체 스스로 자치행정 역량이나 정책 기획·실행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신이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됐다.”

그는 “민주주의는 각종 사회적 갈등과 의견 대립을 토론과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학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1991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의 ‘자치분권 1.0’ 역사도 오랜 시간에 걸쳐 갈등 해결 시스템을 학습하고 또 정착해온 과정”이라고 말했다.

새로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정례화·제도화해 국가-지자체 협력,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방자치 분권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

향후 자치분권·균형발전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검토·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주민주권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당장 2022년부터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돼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의 지방자치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이 주인인 주민주권 시대가 전개되고 ‘지방정부’의 위상과 기능이 대폭 높아졌다. 지방이 국정 운영에서 중앙과 함께 공동 책임자이자 동반자로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시대 체감해야

지자체와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엇이 다를까? 김 위원장은 “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단체 개념이라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권한 사항만 빼고 지방이 마음대로 실력과 역량을 발휘해 주민생활과 삶을 위한 행정을 펴고 이를 위한 세수 재정에서도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는 아직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고 학술적으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일방적인 지도-감독 관계가 아니고 상호간 ‘협력의 무’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 건강한 견제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2.0 시대에 주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와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지자체가 주민 수요와 지역사회의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는 새로운 변화를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체감하게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요 과제로는 “주민주권 구현, 자치분권 내실화, 재정분권 확대”를 꼽았다.

“자치분권 6법 이외에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려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이 필요한데 헌법 개정이 재추진돼야 한다.”

2018년 헌법개정 추진 당시 개헌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이런 선언적 조항이 헌법에 반드시 담겨야 하고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얘기가.

“법률적이고 제도·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는데 무엇보다도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응원, 지지가 이제 더욱 중요하다.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

조계완 기자

주민 사회복지 늘고 도시경쟁력 살아나고

4개 특례시 뭐가 달라지나

경기 수원시에 사는 A씨는 2021년 12월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씨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부부가구 2021년 선정기준액(27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A씨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가 특례시가 됐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인구 118만 명의 수원시와 108만 명의 경기 용인·고양시, 103만 명의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다시 태어났다.

A씨는 이전까지 인구 10만 명이 넘는 중소도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도시의 기초연금 기본공제액은 8500만 원이지만 대도시는 5000만 원 많은 1억 3500만원이다. A씨가 이번에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자 2021년보다 5000만 원을 더 공제받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부부가구 2022년 선정기준액(288만 원)보다 낮아져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 것이다.

수원시는 기초연금 기본공제액이 5000만 원 상향되면서 약 5500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새롭게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 원까지 지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9종 확대

특례시민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주거·교육),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모두 9종의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적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지정

개정 지방자치법 1월 13일 전면 시행으로 특례시 공식 출범

•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 유지
•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



사회복지급여 구간 상향

사업	공제대상	중소도시	대도시(특례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8500	13500
국민기초(생계·주거·교육) 한부모가족	기본재산 공제	4200	6900
국민기초(의료)		3400	5400
긴급지원	재산기준	15200	24100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 창원시, 수원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중소도시에 속했던 수원시는 대상자의 기본재산액 4200만 원을 차감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 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된다. 더 많은 기본재산액을 차감받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당 최대 28만 원까지 늘어난다. 수원시는 “도시 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복지제도

자료: 용인시

0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늘어 기존 중소도시
기준에서 재산이 조금 많아도 혜택 받음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액 증가

02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지원받는 가구 증가

기초연금 재산가액 공제금액이
8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늘어나
중소도시 대비 조금 더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월 최소 3만 원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원받는 가구 증가

03 장애인,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8500만 원 →
재산가액 공제금액 1억 3500만 원
※지원: 월 최소 4만 원~최대 38만 원

한부모가족 4200만 원 →
재산가액 공제금액 6900만 원
※지원: 아동양육비 20~35만 원/월
학용품비 8만 3000원/년

긴급지원 1억 1800만 원 →
재산 범위 기준 1억 8800만 원 이하

긴급지원 대상자 확대

특례시민은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의료·주거·교육),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모두 9종의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된다.

저 생활수준과 물가는 높아졌지만 지역 구분에 묶여 기본재
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특례시가 되면서 해소됐
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
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 원의 급여가 증가했다. 또 한부
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
대 6만 원까지 급여가 늘어났다.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특례시가 되면
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중소
도시는 재산 합계액 1억 52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지만 대도시
는 2억 4100만 원으로 8900만 원이 더 많다.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특례시에 속한 위기가구가 급
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재산 합계액이 2억
2000만 원인 수원 거주 4인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1
월 13일 전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106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가운데

주거비(1~2인 기준) 또한 29만 300원에서 38만 7200원으로
올랐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주거지원 한도액도 늘어나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최대 금액은 약 42만 원에서 약 64만 원으로 22만 원 증
가했다.

특례시민 6만 6000여 명 혜택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계 자료를 활용해 기존보다 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이 2만 2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
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6대 복지급여에 73억 원 상
당을 추가 지원해 시민의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
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는 특례시 지정에 힘입어 생계·의료·주거 등 여
러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해 시민 2만 4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도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관련 예

1



2



1 수원시는 시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발돋움했다. | 수원특례시 2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 | 고양특례시

4개 특례시는 누구보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가 특례 권한을 확보해 독자적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게 되며 도시경쟁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 98억 원(국·도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창원시는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1만여 명의 시민이 약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 주민을 모두 합치면 6만 6000여 명에 이른다.

행정·재정 권한도 광역시급 확대

복지 혜택뿐 아니라 개정 지방자치법은 특례시에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춰 특례시에 권한을 더 주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처리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권한도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인허가 등에서 중앙정부나 도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 시간이 단축

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또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 권한이양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는 2021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며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800여 개에서 출발했던 예비 특례 사무 목록은 검토·분류 작업을 통해 86개 기능사무와 383개 단위사무로 간주려졌다.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건축허가 시도지사 승인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4개 특례시 '도시경쟁력 향상' 기대

4개 특례시는 누구보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가 특례 권

3



3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4 창원특례시의 출범을 알리고 축하하는 타중행사 | 창원특례시

4



한을 확보해 독자적 자치행정을 펼쳐나가면 도시경쟁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는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관광·연구개발(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 특례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월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힘난한 여정을 뚫고 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소방안전교부세 50% 증액

4개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비수도권인 창원은 소방안전

부문에서 시의 권한이 커진 것을 반기고 있다. 창원시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유사 규모의 광역단체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 30만 명 규모의 세종시보다 적었다.

2020년 12월 특례시 출범이 확정되고 2022년 11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며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을 산정할 때는 다른 광역시에 드는 금액 평균의 2분의 1을 가산하도록 하면서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42억 2000만 원보다 절반 이상(50.2%) 증가한 63억 4000만 원(인건비 108억 원 별도)으로 책정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월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이양받은 권한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항만시설 개발·운영권 등 일부에 국한돼 있지만 지방분권법 개정과 함께 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시장 역량을 집중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원낙연 기자

폐열 활용해 연간 4000톤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처리 업체 성림유화 실천 사례

소각로에서 폐기물을 태울 때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 업체는 이 열에너지로 생산한 증기와 온수를 지역개발공사와 여러 에너지 회사에 판매한다. 지역난방이나 열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장에 공급돼 값비싼 원유나 가스 등 연료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그러나 모든 열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180℃ 이상의 온도와 일정 이상의 압력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판매나 이용이 가능하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열은 그대로 버려지기 십상이다.

폐기물 처리 업체인 성림유화의 성북경 시설운영팀 부장은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폐수 처리 시설을 떠올렸다. 성림유화는 산업체에서 위탁받은 폐수를 증발·농축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증발·농축 공법은 폐수를 끓여 순수한 물과 오염물질 등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감압장치를 이용해 100℃가 아니라 60℃만 돼도 증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상온의 폐수를 60℃ 이상으로 끓이려면 상당한 양의 열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안산 지역개발공사 등에 판매할 수 있는 증기를 여기에 이용했다.

성북경 부장은 온도와 압력이 부족해 버려진 폐열을 활용해 폐수의 온도를 어느 정도 올린 뒤 기존처럼 가열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마침 환경부에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하면 설치비를 일부 지원

하는 사업이다.

성북경 부장은 “우리가 고안한 폐열 회수 설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설비는 아니었지만 환경부에서 검증된 설비 말고도 개발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해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했다”고 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의뢰한 기관에서 성림유화에 와서 현장을 확인한 뒤 탄소중립설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2020년 폐열 회수 설비인 ‘열 교환기’를 폐수 처리장에 설치했다.

정부 지원으로 폐열 회수 설비 설치

1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 있는 성림유화 폐수 처리장 위에 올라가 열 교환기의 뚜껑을 열자 영하의 날씨에도 김이 올라왔다. 상온 상태의 폐수를 버려진 폐열을 이용해 50℃ 가까이 예열하고 있었다.

김상호 성림유화 공장장은 겨울에는 폐수의 온도가 20℃ 정도 되는데, 여기서 폐열을 이용해 50℃ 정도까지 미리 데워놓으면 판매용 증기로 본격적으로 끓일 때 온도를 10℃만 더 올리면 되기 때문에 20℃에서 60℃ 이상으로 바로 끓일 때보다 열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림유화가 2020년부터 폐열 회수 설비를 실제로 가동한 결과 기존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걸로 추산하고 있다. 김상호 공장장은 2021년 한 해 동안 약 3만 톤의 폐수를 처리하면서 폐열을 활용해 4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1톤당 3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억 2000만 원의 경제적 효

성림유화가 2020년부터 폐열 회수 설비를 실제로 가동한 결과 기존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걸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약 3만 톤의 폐수를 처리하면서 폐열을 활용해 4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셈이다.



폐수 처리장의 열 교환기 위에서 김상호 공장장(오른쪽)과 성복경 부장이 폐열 회수 설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과를 본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별개로 연간 6000만 원 정도의 증기를 더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동안 성림유화가 얻은 전체 경제적 효과는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폐열 회수 설비를 설치하는 데 총 공사비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지만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따라 성림유화는 정부에서 50%의 지원금을 받았다. 김상호 공장장은 “설비 설치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이 2년이면 끝나 투자금 회수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업체는 설비 설치 비용이 반값으로 줄어들어 좋고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인버터·공기압축기 20~30% 효율↑

성림유화는 2020년 전에도 정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현재 성림유화에는 모두 세 대의 소각로가 있는데 각 소각로에는 두 대의 공기압축기(에어 콤프레서)가 연결돼 있다. 한 대는 구형 공기압축기이고 다른 한 대는 2015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받아 설치한 인버터형 공기압축기다.

김상호 공장장은 “폐기물 처리 업체는 압축 공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폐수를 옮길 때도 압축 공기를 사용하고 소각로에 약품을 뿌려줄 때도 사용한다. 압축 공기를 만드는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데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형 공기압축기는 생산한 압축 공기가 얼마나 사용됐고 잔여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상관없이 계속 가동하는 방식이다. 반면 인버터형 공기압축기는 압축 공기의 사용량에 연동해서 가동 여부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한 압축 공기가 80% 이상 남아 있으면 가동을 멈추고 잔여량이 30%이



1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하로 내려가면 다시 가동하게끔 설정이 가능하다. 소각로가 하루 12시간 가동될 때 구형 공기압축기는 12시간 내내 압축 공기를 생산해야 하지만 인버터형 공기압축기는 8시간이나 9시간만 가동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 소모량이 줄어든다.

성림유화는 2015년 환경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때 인버터형 공기압축기와 함께 외장형 인터버를 기존 구형 공기압축기에 연결했다. 구형 공기압축기도 인버터형 공기압축기와 같은 방식으로 전력 소모량을 줄인 것이다. 성복경 부장은 “전력량은 여러 변수가 많아 계산이 쉽지 않지만 20~30% 정도 효율이 향상된 것 같다. 인버터를 설치한 뒤 공장의 전체 전기가 확실히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매하고 이보다 적으면 판매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출량이 많은 폐기물 처리 업체는 배출권을 사들이느라 부담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성림유화는 평소에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호 공장장은 “온실가스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직접 가서 보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며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던 게 이번에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

글 원낙연 기자, 사진 박운섭 기자



1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성림유화 전경 2 김상호 공장장이 2020년 정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폐열회수 설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3 성북경 부장이 2015년 정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으로 구형 공기압축기에 설치한 외장형 인터버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 정부 예산 341% 늘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1년까지 7년 동안 중소·중견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104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144개 사업에 모두 325억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지원사업에는 탄소중립 선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해 2021년 222억 원보다 341% 늘린 9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2022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업체가 재생에너지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 기기, 탄소 포집, 불소 저감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60억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50~70%)를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감축 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공모 기간인 7월 29일까지 상시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2022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관 손 잡고 세계 최고 수소경제 날갯짓

수소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시행한 지 2월 5일로 1년째를 맞았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다. 그동안 수소 생산·저장·수송·활용까지 아우르는 수소경제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수소차와 수소 연료전지 생산 및 보급 세계 1위 자리를 2년 연속 유지하고 수소 충전소 구축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 전문기업 발굴,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수소 판매가격 공시,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 수소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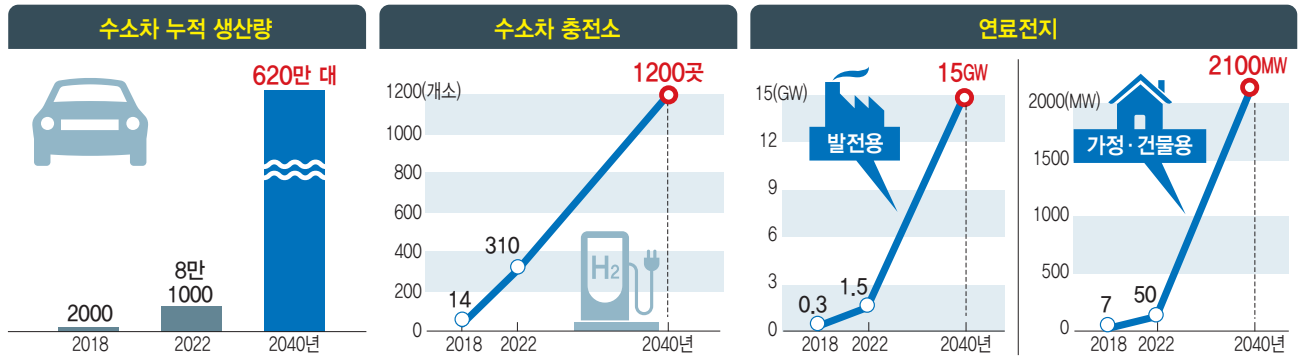
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 갖춰가고 있다.

수소법 시행 이후 첫 국가 법정계획인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 2022년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되는 것도 의미가 크다. 국무총리 산하 수소경제위원회가 2021년 11월 26일 발표한 이 계획의 뼈대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수소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다.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2790만 톤의 청정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과 함께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수소 자급률을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국내 에너지 최종 소비에서 49.3%(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석유를

신인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 한국남부발전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 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제치고 2050년에는 수소가 단일에너지원으로써 최대 비중의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약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 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2022년 예산 55% 늘어난 1조 3106억 원

수소경제 활성화 초기 단계의 마중물은 정부 재정이다. 수소 관련 정부 재정 지출은 2017년 748억 원에서 2021년 8454억 원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2022년 예산 또한 전년 대비 55%나 증가한 1조 3106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수소 활용 확산과 생태계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2022년 말까지 누적으로 수소차 3만 7000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310기 구축 등을 목표로 세우고 관련 예산 8928억 원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수립한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 계획'에서 2025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선 원칙적으로 최소 1기 이상, 전국 합계 45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는 주로 정부 재정을 동원해 거점 지역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이후 보급 성숙기에 접어들면 민간 주도의 수소충전소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0년이 되면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2040년에는 15

분 이내에 수소충전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도 2022년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수소 시범도시는 반경 3~10km 범위의 도시 공간 내 주거 및 교통 수단의 주된 사용 에너지를 수소로 활용하며 지역 특화산업과 혁신기술 육성까지 수소와 접목시키는 도시를 말한다. 수소를 발판으로 한 미래형 도시의 모습을 특정 지역에서부터 구현하겠다는 게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취지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경기 안산시, 울산광역시, 전북 전주시·완주군 등 3곳을 수소 시범도시 사업지로, 강원 삼척을 수소 연구개발(R&D) 특화도시로 각각 선정할 바 있다. 선정된 시범도시와 특화도시 네 곳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약 12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예산을 보태고 다양한 민간 투자까지 유치해 2022년 6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조성 공사를 마무리한다. 수소경제의 전 단계에 걸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실증 사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이후에는 '수소도시 확장기'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수소 시범도시 조성 목표를 전국 시·군·구의 10%로 잡았다. 시범도시로 선정되면 수소 통합운영센터와 생산 및 저장 설비, 파이프라인, 연료전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도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린 수소의 경제성을 높이려면 기술 혁신과
시장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그린 수소 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2025년부터 탄소저장고로 변신할 동해가스전의 해상 플랫폼 | 한겨레

록 입지 규제 등에 특례를 적용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 사업도 통합·연계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개 육성

수소 생산과 공급 쪽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로 맡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 수소 전문기업을 최소 30개 이상 추가 발굴해 2025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개 육성'이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2040년까지는 수소 전문기업이 1000개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소법에 시행 근거를 담은 수소 전문기업 제도는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 비중이나 총투자비 가운데 수소 관련 연구개발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중견·중소기업을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총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수소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 수소 연구개발비 비중은 3% 이상인 경우다. 2021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된 수소 전문기업은 현재 19개다.

이들 전문기업에는 기술 및 제품 개발 실증과 해외 진출 등에 대한 행정·금융·세제 지원을 하고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현장 애로 해결과 기술·경영 상담(컨설팅)까지 제공한다.

산업부는 2022년 수소 전문기업 지원은 기술 사업화와 판로 개척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시제품 제작과 인증 획득

등 일부 분야별 사업비 지원 한도와 기간을 늘려주되 더 많은 수소 전문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곳당 누적 지원 한도를 4억 50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소 전문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이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할 경우 시장 조기 확보를 위한 별도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도 2022년 약 10억 원을 신설했다. 2022년은 지자체와 연계한 예비 수소 전문기업 육성 사업까지 시행한다. 기술력은 있지만 매출액 요건 등의 미비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신생 기업을 지자체 주도로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잠재력 있는 수소 관련 기업을 발굴해 육성 계획을 제시하면 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각각 절반씩 연계해 패키지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월 말까지 예비 수소 전문기업 신청 공고를 하고 4월까지 3개 지자체를 선정해 각각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 수소 실증사업 확대

수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각종 산업 공정과 전기·열 에너지의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천연가스·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사용 단계의 수소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물만 나오는 100% 청정 에너지다.

문제는 생산 단계의 수소다. 현재 공급되는 수소는 99% 이상이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개질 수소이거나 석유화학·철강 제품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 수소이다.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수소 생산은 기후위기 대응의 해답이 될 수 없다. 완전한 청정 수소, 즉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면 뽑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결합한 수전해 수소 생산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을 보완하기도 한다. 수소는 자체로 에너지의 원천이자 에너지 저장·전달 매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린 수소 또한 낮은 효율과 높은 생산 단가 때문에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대안을 100% 그린 수소 공급으로 잡고 중간 단계에서는 천연가스 추출 수소나 부생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기술(CCS)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국내 에너지 대기업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포집·저장 기술의 상업화 일정에 맞춰 2030년까지 동해가스전 등지에 9억 톤 이상의 탄소 저장소를 확보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의 실증사업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300억 원을 투입해 모두 10MW(메가와트)급 수전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제주 상명풍력단지에서 250kW(킬로와트)급 수전해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울산 1MW급, 동해 2MW급 등 중소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실증사업들이 드문드문 진행되어 왔다. 10MW급 용량의 수전해 실증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증사업 추진 대상에는 경기 안산의 시화 방화머리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2.5MW급,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에서 3MW급 등이 포함된다.

2022년 상반기 중 '그린 수소 사업단' 발족

실증사업은 대용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부터 잉여 전력을 공급받아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을 실증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출력 제어량 변화에 따른 전력계통망 안정을 점검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또 수전해 시스템의 최적 운전 경험과 생산 및 경제성 데이터 등을 축적해 국내외의 비교 분석을 하면 효율화와 대용량화 등을 위한 국내 수전해 기술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실증 프로젝트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수소충전소 | 문화체육관광부

종료되는 2026년에 연간 약 1000톤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 수소 1000톤은 승용 수소차 약 4300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전국 10곳의 수소 생산기지를 대상으로 상반기 내 공모를 거쳐 수전해 방식의 수소 생산기지 세 곳을 신규로 지정해 한 곳당 54억 3000만 원의 설비 투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소 생산기지는 하루 1톤 생산량의 소규모 시설 7곳과 하루 4~7톤 생산량의 중·대규모 시설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개질 수소 기반의 기지다.

그린 수소의 생산과 보급 확대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함께 기업의 활발한 참여도 필요 조건이다. 그린 수소의 경제성을 높이려면 기술 혁신과 시장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그린 수소 사업에 적극 뛰어 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그린 수소 생산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관심 기업을 중심으로 2022년 상반기 중 '그린 수소 사업단'(가칭)을 발족하기로 했다. 사업단에서는 국내 그린 수소 생산 및 활용 전략, 수전해 공정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 및 실증 프로젝트 발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2022년은 국내 기업들이 그린 수소 사업화의 시동을 거는 원년이 될 수 있을까? ●

박순빈 기자

즐거로운 탄소중립 생활 홍화정 그림

56. 전기밥솥의 휴식





세계 최초 친환경 불가사리 제설제 개발 '스타스테크' 바다의 골칫덩이로 도로 위 눈을 치운다

1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불가사리는 보통 해양 쓰레기로 취급된다.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불가사리 중 아무르불가사리는 강력한 포식활동으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어민들의 양식장을 황폐화시켜 골칫거리다. 바지락·조개·소라 등 어패류를 잡아먹고 산호초를 파괴한다. 신체 일부가 잘려도 죽지 않을 만큼 재생력이 뛰어난데다 독이 있어 먹을 수도 없어 처리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매년 1000여 톤의 불가사리를 수거해 소각하는 등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신생기업인 스타스테크(STARSTECH)는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스타스테크는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다공성 구조체를 이용해 일반 제설제의 문제점인 철·콘크리트 부식을 기존 제품보다 개선해 정부가 선정하는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뽑혔다.

에너지 절감 동시에 환경피해 최소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심사위원들은 스타스테크의 친환경 제설제 'ECO-ST1'에 대해 ▲쓰레기가 자원으로 바뀌는 혁신적 아이디어 ▲폐기물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상용화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 등으로 평가했다.

스타스테크가 개발한 제설제는 눈이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식 문제를 완화했을 뿐 아니라 용빙 성능(눈이 녹는 효율)도 개선했다.

통상 제설제에 들어 있는 염화나트륨·염화칼슘은 눈을 녹이는 과정에서 염화이온을 발생시키며 이는 철근이나 아스팔트, 시멘트 등을 부식시키는 원인이 된다. 콘크리트 균열로 구조물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이같은 손상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제설제로 인해 토양의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토양의 염분도가 높아져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 또 도로를 운행하는 승용차 부식 피해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염화칼슘이 마르면서 발생하는 분진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스타스테크가 개발한 친환경 제설제 'ECO-ST1'은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다공성 구조체를 이용해 눈이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화이온을 흡착함으로써 염화이온의 부식작용을 억제한다. 특수 코팅된 구슬 형태로 만들어 분진도 없고 제설 능력도 뛰어나다. 'ECO-ST1'의 콘크리트 파손율은 염화나트륨의 24%에 그치지만 용빙 성능은 166%에 이른다. 일반 제설제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도로 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경제적이다. 해양 쓰레기인 불가사리를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스타스테크는 정부의 혁신제품 지원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국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021년 매출 171억 원(공공조달 128억 원)을 달성했고 캐나다 정부와 실증을 완료한 후 납품

“기존 제설제 대비 효과 월등!
부식·환경오염 걱정도 덜었어요”

불가사리 제설제 사용 지자체 관계자



ECO-ST1을 이용한 제설작업 10분 후

불가사리 제설제는 탁월한 제설효과는 물론, 도로·차량·식물에도 무해해 토양·수질오염의 우려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관도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하니 많은 지자체에서 애용하고 있어요.

#소금 대비 부식률_0.8% #분진 없고_효과 상당기간 지속



스타스테크는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다공성 구조체를
이용해 일반 제설제의
문제점인 철·콘크리트
부식을 기존 제품보다
개선해 정부가 선정하는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뽑혔다.

서울 구로구 스타스테크 본사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스타스테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1월 서울 구로구 스타스테크 본사를 방문해 혁신조달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안 차관은 간담회에서 “스타스테크는 혁신조달이 기술 창업을 육성한 대표 사례”라며 “판로가 부족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이 실험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불가사리 활용한 사업 적극 확대 예정

스타스테크의 친환경 제설제는 일본 공인시험기관에서 중류수보다 부식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2020년 일본 북해도립종합연구기구의 강재부식 시험에서 스타스테크 제설제의 부식도가 3.1mdd(1mdd는 1일 100cm²당의 금속부식량)를 기록해 염화나트륨(23.8mdd), 염화칼슘(34.7mdd)은 물론 중류수(9.2mdd)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현재 유럽연합(EU)·일본·러시아 등에서 원천 특허를 등록한 상태다.

양승찬 스타스테크 대표는 고교시절부터 관련 창업을 준비했다. 이후 불가사리 성분의 이온 흡착 경향성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등 불가사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양 대표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제설제와 연관성에 더욱 주목하게 됐다.

2017년 창업해 친환경 제설제 개발에 착수한 스타스테크는 2018년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하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입주 첫 해 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듬해에는 30억 원으로 성장했다. 2021년 6월에는 불가사리 무상공급을 통한 원가 절감, 양식장 피해 해소 등 경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그린 뉴딜 유망기업’에 포함되기도 했다.

친환경 제설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공서·기관 등을 통해 국내시장을 개척했고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해외 판로 발굴 및 네트워크를 확보해 수출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스타스테크는 앞으로 불가사리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표는 “불가사리를 완벽하게 재사용하는 중기 계획을 잡고 있다”며 “불가사리에서 다공성 구조체를 추출하고 나면 남은 성분들까지 완벽하게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가사리 폐기물을 발효한 액상비료와 불가사리에 함유된 콜라겐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 미용제품 등도 개발 중이다. ●

이찬영 기자

해방둥이와 MZ세대 모두 “우리가 선진국이다”

-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선진국 지위로 격상한 것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선진국 그룹 격상 의미

세계에서 단 7개 국가만 가입한 클럽이 있어. ‘30-50클럽’이지. 일본(1992년)을 시작으로 미국(1996년), 영국(2004년), 독일(2004년), 프랑스(2004년), 이탈리아(2005년) 순으로 가입

한 후 우리나라가 2018년에 이름을 올렸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000만 명이 넘어야 하는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필요한데 이를 달성한 거지.

우리나라는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고 2012년 6월 23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었지만 국민소득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지.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소득 증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덕분에 2018년 말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거야.

사실 30-50클럽 가입 국가들은 과거에 식민지를 거느리던 선진국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입은 더욱 의미가 있어. 세계 최빈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열에 올라섰기 때문이야.

“30-50클럽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라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으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후배 세대로서는 감격스러

지표로 보는 국정성과 세계선도국가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

선진국 역할·기여 확대

자료: 대한민국정부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

유엔무역개발회의
57년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지위 변경 (2021)

식민지 경험한 나라는
첫 번째

30-50클럽
7번째
가입 (2018)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청와대는 문재인정부가 이뤄낸 성과라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뒀아한다고 강조했다.

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

무엇보다 선진국 기준인 소득 3만 달러 진입은 정부의 경제 실력을 가늠하는 시금석과 같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3개뿐이야. 문재인정부가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2021년에는 3만 5000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한 경제 성적표인 거야.

‘30-50클럽’ 가입과 선진국 지위 격상

같은 맥락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호를 앞에서 끈 선배세대 해방둥이(1945년 광복 즈음에 태어난 세대)와 뒤에서 민 후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모두가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지.

경제 성적표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도 대단한데 1년 후에 또 다른 희소식이 날아왔지.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선진국 지위로 격상시킨 거야. 잇따른 낭보는 우리나라

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국제사회의 공식인증과 같은 거야. 우리 국민 모두는 세계 어디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선진국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야.

유엔(UN) 총회의 상설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그룹 A)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격상시켰어.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의견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 격상 안건을 통과시켰어. 이 점은 더욱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이유기도 하지.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야.

UNCTAD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룹 A에서 그룹 B로 변경됐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31개 국가

글로벌 혁신 강국

블룸버그
‘혁신지수’ (2021)

60개국 중
1위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 (2021)

132개국 중
5위

3

선진 공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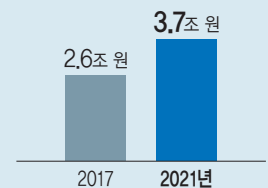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식량원조 확대

세계식량계획
공여국 중
11위

매년 쌀 5만 톤
식량위기에 지원(2018년~)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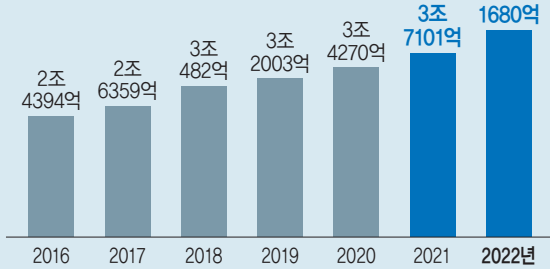


‘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원조

4

매년 늘어나는 공적개발원조 규모

(단위: 원) 자료: 외교부



와 함께 그룹 A 국가의 일원으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야.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성과인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 세계를 설득하고 우리의 실력과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점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만한 거야.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가 열릴 때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대 표부 대사는 공식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 재평가받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고군분투 했지.

이 대사는 2021년 6월 22일 “우리나라는 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원조 공여국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어. 결국 마지막 날 최종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는 선진국 그룹 B로 격상됐지. 외교부는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우리나라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 사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지.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상호 무역을 증진시키며 여러 글로벌 경제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 조정, 활

동 검토, 각국 정부 간 개발정책의 조화 등을 담당하는데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UNCTAD 국제회의는 4년마다 한 번 열려. 우리나라는 1965년에 가입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정부가 이뤄낸 성과라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분명한 사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고 강조했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기쁨을 나누자는 거야.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소중한 성과마저 부정하고 비하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라는 언급은 타당한 평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앞으로 행보가 더욱 중요한 거야. 문 대통령이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전력은 정말 자부할 만합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은 그래서 유념할 필요가 있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 받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또 하나의 성과는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수많은 국가들을 제치고 문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점이야. 영연방 국가 3개국(인도·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유일한 초청국가인 것은 물론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점은 국제적 위상이 사실상 G8에 해당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했다는 국제적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어.

박 수석이 소개한 G7 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일화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은 정말로 G8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지. 보건을 주제로 한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의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을 했어.

박 수석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도 최상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와서 G7 정상회의도 잘될 것”이라고 했고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그렇다. 한국은 단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력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방역·보건, 문화, 군사력, 외교,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G7 국가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공인받게 됐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이동하고 있다. | 청와대

연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거야. 여기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맞다”, “다들 생각이 같다”며 호응했다는 거야.

당시 기념사진도 화제였지. G7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존슨 영국 총리를 가운데에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양 옆자리를 차지했지. 기념촬영도 존슨 총리가 가장 앞줄의 가운데에 서고 오른쪽에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오른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하며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지.

박수현 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가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우리 후세 대통령의 자리는 더 영광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이번 G7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과거가 쌓아온 현재의 성취에 대한 확인과 미래의 자신감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지. 주요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실상 G8로 도약이자 달라진 국격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인 셈이야.

G7 국가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코로나19 대응형에 맞선 대응도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계기가 됐지.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으로 꼽고 있어.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강국들과 대등하게 선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목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지. 선진국 진입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이유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력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방역·보건, 문화, 군사력, 외교,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G7 국가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공인 받게 됐다”고 했지.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디까지 올라설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 기대해 보자고. ●

이현호 <서울경제> 기자

“안전보다 중요한 인권은 없다” 밀폐공간서도 안전하게 일하도록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이 밀폐공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긴급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우리의 발밑 지하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각 가정에서 흘러보내는 생활하수와 빗물 등이 모이는 지하 하수도 시설과 밀폐공간 등은 수시로 유지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곳이다. 문제는 이런 밀폐공간에서는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사망 사고는 물론, 폭우로 배수시설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수몰되는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던 서울시설공단은 노동자들이 지하 밀폐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을 통해 밀폐공간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개발자와 현장의 공사감독에게 직접 들어봤다.

10년간 질식 재해 사망·부상자 312명

“하수도 공사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유독가스로 질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수시설을 점검하던 작업자들이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작업자들의 안타까운 질식 사고와 수몰 사고, 지하의 밀폐공간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상하수도 처리장의 각종 탱크, 상하수도 관로, 하수 박스 등의 밀폐공간은 유해가스가 흘러들거나 폭

정부·사회혁신 및 적극행정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제도혁신 성과를 수혜 현장과 수혜자의 말을 통해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노동자들이 지하 밀폐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을 개발한 서울시설공단 사례입니다. <편집자 주>



서울시설공단 관계자가 작업장 입구의 유해가스를 확인하고 있다.

우가 기습적으로 내리면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2019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재해 사망자 수는 166명이며 부상자 수는 146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 재해 발생의 원인을 없애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2018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공동개발을 시작했다. 물론 통신기술과 경보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제품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선 20년 공사감독 경력의 조건영 서울시설공단 노동이사는 “중소 기술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개발 후 수익성과 실효성도 적어 보였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3년에 걸쳐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안도하고 기뻐해”

서울시설공단 이강후 공사감독

서울시설공단에서 밀폐공간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이강후 공사감독이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을 접한 것은 2020년이였다. 당시 청계천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구역은 비가 내리면 물이 한꺼번에 모이는 구간이라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작업해야 했다. 따라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이 개발되고 처음으로 공사 현장에 적용한 날, 공사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 감독은 “현장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테스트하기 전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됐다. 그리고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빗물 센서에 물을 흘렸는데 경보기가 곧바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시스템을 보고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무척 기뻐했다.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에 감동하며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복합 유해가스가 많은 맨홀 작업장에서 공사할 때도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사전에 ‘복합가스 안전 유무’를 파악하고 들어가니 확실히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감독은 “지하 밀폐공간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사고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척 무겁다”면서 “더 많은 공사 현장에서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 우리 사회가 이들 덕분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작업 전** 내부 유해가스 안전 상태 'LED 표출판' 실시간 확인
- 작업 중** 외부 기습 폭우, 내부 가스 유입 시 자동 경보 사이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이란 지상과 지하의 위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즉 작업장 내부와 지상에 각각 유해가스와 기습 강우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감지센서'와 위험 상황 발생 시 소리 경보와 불빛 경보가 작동하는 '위험 경보기'를 설치한 후 지상과 지하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발광 다이오드(LED) 표시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찰(모니터링)한다. 그리고 위험 상황 발생으로 경보기가 작동하면 작업자가 즉시 대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울러 서울시설공단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동선과 지상·지하의 위치 연계 지도를 현장별로 제작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와 합동 모의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이후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보수공사'를 비롯해 하수 박스, 하수 탱크, 복개 구조 등 12개 밀폐공간 공사 현장에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을 적용해 현장의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조건영 이사는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이 가져다준 가장 큰 성과는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위험 정보 전달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전국의 모든 지하 밀폐공간 작업 시 이 시스템이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스마트안전경보시스템은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기술이 적용돼 앞으로 더욱 발전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이사는 "현장 노동자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고 우리의 이웃이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인권은 없다. 단 한 명의 작업자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서울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작업자와 시민 모두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 김민주 기자, 사진 서울시설공단

연 9%대 금리 수준 효과 청년희망적금 가입하세요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선보인다. 이에 앞서 2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서비스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청년희망적금 발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선보인다고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경남은행은 2월 28일, SC제일은행은 6월경 발매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대상

예를들어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 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 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 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 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

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 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 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 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는 것이다.

가입희망자는 2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발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발매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발매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한다.

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정식 발매 첫 주인 2월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이 가능하다. ●

심은하 기자

청년창업 망설여지나요? 여러분의 잠재력에 투자하겠습니다

청년 전담 부서가 된다 ④ 금융위원회

2021년 9월 9개 정부부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교육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는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9개 전담 부서는 하나의 팀으로 17건의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2021년 11월 발표했다. 그동안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한 불편하고 부당한 제도를 여러 부처가 협업해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공감>은 전담 부서장의 목소리를 통해 부처별 세부 정책 내용을 차례로 살펴본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옛 신용보증기금 사옥에 위치한 프론트원(FRONT1),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 연면적 3만 6259㎡에 이르는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신생기업 복합지원공간'임을 내걸고 있다. 2020년 7월 정식으로 문을 연 프론트원은 창업 공간 지원부터 초기 투자는 물론 재무·회계·법률 등 제도적인 문제 상담까지 신생기업이 단계적으로 커가는 데 필수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 2021년 12월 기준 입주 기업은 113개로 개소 당시 45개에 비해 2.5배 늘었다. 창업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할 때도 있다. 이곳의 운영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가 맡고 있다.

정부가 42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프론트원 펀드)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프론트원 내 청년창업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프론트원 펀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프론트원과 연계해 입주, 투자금 유치, 창업 프로그램, 공공기관 연계 등을 일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공간' '투자' '네트워크'는 소위 창업 생태계의 3대 요소로 꼽힌다.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최치연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정책 가운데 창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업 지원은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직결돼요. 하지만 시장

금융위원회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창업지원펀드(프론트원) 조성

현황▶ 실적 기업 위주로 투자 지원

개선▶ •기술력과 사업성 갖춘 신생기업에도 적극 지원
•세계 최대 신생기업 복합지원공간 프론트원·디캠프와 연계해 청년 신생기업 및 청년고용 우수 신생기업 투자 등을 위한 총 420억 원 규모 펀드 조성(2022년 3월)

에서는 기업의 실적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사업성 등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빛이 바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잠재력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프론트원 펀드를 통해 청년 신생기업이나 우수 신생기업을 육성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끄는 게 목표죠."

청년 신생기업 매년 40만 개 생겨

프론트원 펀드는 청년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청년창업 리그'와 신생기업이 선호하는 데모데이 프로그램인 '디데이

**"청년의 잠재력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프론트원 펀드를 통해 청년 신생기업이나 우수 신생기업을
육성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끄는 게 목표죠."**



청년창업가들이 2021년 11월 7일 서울 마포구 신생기업 복합지원공간 프론트원(Front)에서 열린 'IF2021'(Imagine Future) 페스티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D.DAY)로 나눠 운영된다. 각각 300억 원, 12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위탁 운용사가 꾸려간다. 프론트원과 디캠프 연관 기업에 50~60%를 투자하는데 프론트원·디캠프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한 적이 있는 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투자를 받은 기업 등 투자 조건은 다른 목적성 펀드에 비해 상당히 유연하다 할 수 있다. 청년창업리그의 경우 30%는 청년창업(대표권이 있는 임원 1명 이상이 만 39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율이 50% 이상) 유관 투자다. 운용사는 이 실적과 연동해 성과보수를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청년 신생기업은 매년 40만 개 이상 생기며 전체 신생기업의 33~34%를 차지한다. 특히 2020년은 49만 개까지 늘어나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포브스가 선정한 '2021년 아시아 30대 이하 리더' 가운데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 신생기업은 16곳이나 된다. 선정 당시 기준 대표의 나이가 모두 20대일 정도로 청년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국내 신생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018년 기준 31.2%에 그친다. 이는 미국(50.6%), 프랑스(50.1%), 핀란드(44.4%) 등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 같은 청년의 어려움을 듣고자 금융위는 연중 두 차례 열리는 금융발전심의회 안에 청년분과인 '금융발전심의회 퓨처스(Futures)'를 설치하는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창업 환경 개선 위해 집중 투자

최치연 과장은 “우리나라의 청년 예비 창업자는 창업 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등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창업 교육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자들은 연봉 인상 등으로 개발 인력 수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은 인력, 장비 등 최신 정보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들의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정책과 신설을 기해 앞으로 자산관리와 일자리 지원, 청년 금융 사각지대 보완 등 다방면에서 청년 금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과장은 코로나19에도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업은 세상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자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창업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요. 금융위는 청년창업펀드 외에도 다양한 정책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신생기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겁니다.”◎

조윤 기자



코로나 시대 문화 관람이 꺼려지나요? AI 로봇과 함께 안전하게 누리세요!

영화박물관에 들어서면 복도 한쪽에 충전 중인 인공지능(AI)로봇 ‘큐아이’가 눈에 띈다. 가까이 다가서자 “전시실 내에서는 뛰지 마시고 여유롭게 관람해주세요”라는 음성이 나왔다.

AI 로봇 ‘큐아이’ 전시 해설 이용해보니

자율주행기반의 인공지능(AI) 로봇이 전시해설 안내를 하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국영화박물관을 찾았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정보무늬(QR코드)를 등록한 뒤 영화박물관에 들어갔다. 화~일요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영화박물관에 들어서면 복도 한쪽에 충전 중인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가 눈에 띈다. 가까이 다가서자 “전시실 내에서는 뛰지 마시고 여유롭게 관람해주세요”라는 음성이 나왔다. 큐아이 앞쪽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고 뒤쪽에는 기획 전시 중인 정훈이 작가의 작품들이 그려져 있다. 앞쪽 화면에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이 쓰여 있고 큐아이에게 질문하고 싶으면 “하이 큐아이”라고 부르거나 화면 상단의 마이크 그림말(이모티콘)을 누르라는 설명도 함께 있다.

“하이 큐아이, 안내해줘”라는 말을 건네자 ‘한국영상자료원 알려줘’, ‘한국영화박물관 궁금해’, ‘한국영화와 친해지기’ 등의 목록이 뜨고 아래쪽에는 20분짜리 일반문화해설과 10분짜리 어린이용 해설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문화해설을 누르자 큐아이는 곧바로 충전기에서 벗어나 영화박물관 큐레이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이 큐아이” 부르면 로봇이 전시 해설

한국영화박물관은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로 나뉘어 연

중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설 전시는 한국영화사를 14가지 세부 주제별로 나눠 전시하며 기획 전시는 2022년 3월 20일까지 ‘정훈이만화, 영화와 뒹굴뒹굴 25년’이 마련돼 있다.

일반문화해설은 상설 전시 중인 한국영화 100년이 대상이다. 1900년대 초 한국영화의 탄생과 성장에서부터 1960대 중흥기, 1970~1980년대 쇠퇴·불황기를 거쳐 2000년대 ‘웰메이드 시대’까지 과정이 관련 전시물과 설명 글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K-콘텐츠의 과거와 현재가 연대순으로 정리돼 있다.

큐아이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가 시대별 관련 전시물 앞에서 관람객 쪽을 바라보며 설명을 시작했다. 박물관에 적혀 있는 설명을 요약한 내용도 있지만 박물관에 없는 자료와 내용을 곁들여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큐아이 본체에 설치된 화면으로 시대별로 유명했던 감독의 얼굴과 작품 속 장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돕는다. 화면 아래쪽에는 수어(수화언어) 설명도 있어 청각장애인도 큐아이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큐아이는 한 시대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주세요”라는 음성과 함께 잠시 대기한다. 일부러 큐아이의 길을 막아섰더니 큐아이는 한쪽으로 비켜 움직이면서 정해진 장소로 이동했다.

큐아이는 마지막 웰메이드 시대까지 설명을 마친 뒤 관람객들의 질문을 기다리는 듯했다. 잠깐 뒤 큐아이는 “충전이



큐아이가 나운규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며 해방 전 한국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면 아래쪽에서는 수어로 설명한다.

필요합니다. 잠시 후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충전 장소로 이동해 또 다른 관람객을 기다렸다.

국립현대미술관·국립극장·한국영화박물관 ‘큐아이’ 도입

큐아이가 들려주는 20분짜리 해설만으로 한국영화의 역사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큐아이의 설명을 듣고 한국영화 전반을 이해한 뒤 다시 한번 꼼꼼히 박물관을 둘러보면 큰 도움이 될 듯했다. 다만 큐아이의 음성이 작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점은 아쉬웠다. 전시 공간에서 음량을 키우기는 어렵겠지만 박물관 자료를 둘러보면서 큐아이의 해설을 듣기는 쉽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021년 12월 27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영화박물관) 등 3개 기관에 자율주행기반의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를 선보였다.

큐아이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와 자율주행기반의 문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다. 큐아이는 문화(Culture), 큐레이팅(Curating), 인공지능(AI)의 합성어로

‘문화정보를 추천(큐레이팅)하는 인공지능’과 ‘문화정보를 추천(큐레이팅)하는 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큐아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축했던 모델보다 좀 더 고도화된 성능을 탑재했다. 위치기반 안내서비스와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가에 맞춘 다국어(한국어·중국어·영어·일본어) 문화 해설 서비스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특화 서비스를 자랑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문화해설 서비스와 음성 안내 중 자막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 해설 음성서비스도 선보였다.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동행해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 특별전’ 전시 해설

큐아이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특화된 서비스를 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2021년 공모를 통해 큐아이를 도입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콘텐츠를 학습한 큐아이 5대를 준비해 2021년 말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 있는 큐아이는 'MMCA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의 전담 해설사 역할을 맡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년 동안 코로나19 일상 속에 자칫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큐아이의 도입으로 안전한 문화시설 관람을 도울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설에 큐아이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국립극장(해오름극장)에 배치된 큐아이는 특화된 공연 안내서비스를 한다. 관객이 손쉽게 좌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치를 기반으로 동선을 안내한다. 관객이 좌석번호를 알려주면 좌석 위치를 안내하고 공연 일정도 안내한다. 또 국립극장의 역사와 해오름극장, 전속 단체 소개 등 문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도 편리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 있는 큐아이는 'MMCA 이견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의 전담 해설사 역할을 맡고 있다. 큐아이는 자율주행을 통해 개별 작품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주요 명작을 소개한다. 관람객은 재능 기부한 배우 유해진의 친근한 목소리로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

13개 주요 작품에 대한 전문가 해설을 접할 수 있는 도슨트 투어를 진행하는데 원작 확대 보기, 조각작품 3D 입체영상 보기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반 해설 서비스를 지원한다.

문화 해설 서비스 6만여 회 제공

큐아이 서비스는 2018년부터 박물관·도서관·미술·전시·공연·영화 분야에 구축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4대), 국립나주박물관(1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1대), 국립제주박물관(2대), 제주항공우주박물관(1대), 국립국악원(1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1대), 국립태권도박물관(1대), 국립현대미술관(2대), 국립극장(2대), 한국영화박물관(1대) 등 11곳에 큐아이 17대를 보급했다. 인공지능 대화 안내서비스 43만 건, 문화 해설 서비스 6만여 회를 제공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년 동안 코로나19 일상 속에 자칫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큐아이의 도입으로 안전한 문화 관람을 도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설에 큐아이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큐아이 소개 영상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영화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글·사진 이찬영 기자

어른은 반드시 슬프다



정육점 엄마

권은정
월천상회

부모들은 대개 아닌 척하지만 죄다 욕심쟁이라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많습니다. 이는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만 주고 싶다'는 불가능한 꿈을 꿀 정도입니다(그런 게 가능할리가).

나 역시 부모의 한 사람이라 최근 그림책에 재미를 붙인 다섯 살 첫째에게 좋은 책만 읽어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섯 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나이다 보니 다섯 살 기준의 좋은 책이 무엇인지 당최 알 길이 없다는 것이고 이 녀석의 취향이 보통 편협한 게 아니어서 바뀌거나 나오지 않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자동차 관련 도서나 도감만 주야장천 읽어주길 반복하던 어느 날 아직 읽지 않은 <정육점 엄마>를 무심결에 집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참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권은정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글과 다양한 기법이 혼합된 재미있는 그림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정육점을 운영했고 자신은 싫은데도 그 고기를 배달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닐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 그것이 전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작가의 사정권 밖에 있기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독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때 (어릴 적 작가는) 그다지 성숙했다거나 좋은 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혹시 작가가 이 글을 본다면 너그러운 용서해주세요).

한데 그림책을 보면 반드시 명치가 뜨거워집니다. 기필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책은 첫째 아이의 잠자리 책으로 녀석과 함께 누워 읽어줬을 뿐인데 정육점 고기를 비닐봉지에 싸서 빙빙 돌리는 상상을 하고 거실을 뛰어다니는 녀석의 모습에 나는 마냥 뜨거워질 뿐입니다.

고기를 배달하는 자신이 부끄러워 비닐봉지째로 내동댕이친 아이의 마음이, 손님에게 전화로 연신 죄송하다는 엄마를 보며 혼날까 두려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그럼에도 하루 종일 한마디 하지 않는 엄마의 마음이, 고된 일을 마치고 잠들기 직전에서는야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른인 내게는 너무 빨리 배달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릴 적 마음이 모두 무언가로 덮여싸여져버립니다. 단지 살아 있다는 것, 단지 움직인다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던 즐거움이 죄다 사라집니다. 어른은 지금의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다들 그렇게 자신의 어릴 적 마음이 시드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얼마나 시들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육점 엄마>는 첫째를 위해 집어 든 책이었으나 나를 위해 집어 든 책이 됩니다. 내 마음 위, 열기설기 붙어 썩고 있던 고약한 것들을 치워줘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게 어른을 흉내 내며 살아온 시간이 깁니다. 긴 시간, 사람의 마음에 긴 찌꺼기가 그리 쉬이 사라질리아 있겠습니까마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잠시 보고 싶은 분에게 이 책은 한사코 적절합니다.

정육점 엄마의 명복을 빕니다. ●

김창규 판지일보 편집장

모나리자부터 나폴레옹, 비너스까지 역사와 신화 속에서 불러낸 이름들



1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77×53cm, 나무판에 유화, 1503~1506

2 '큐피드의 키스로 소생한 프시케', 155×168×101cm, 대리석, 1793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3 '밀로의 비너스' | ©Fred Romero from Paris, France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4 '함무라비 법전', 225×79×47cm | ©Deror avi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대표 소장품 10선

48만 점이 넘는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루브르 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 때 한 사람의 뛰어난 예지로 보석 같은 소장품 사수에 성공했다. 1940년 6월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 나치 정권은 프랑스 내 모든 예술품의 이동을 금지했다. 프랑스 정부가 점령국의 약탈을 피해 미술 작품을 숨기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독일군 장교가 루브르에 파견됐지만 모나리자 등 명품 컬렉션 4000여 점은 박물관에 없었다. 독일의 침략을 예감한 자크 조자르(1895~1967) 루브르 박물관 관장이 전쟁 발발 전인 1939년 8월 하순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주요 소장품을 프랑스 내 비밀 장소에 숨겨놓았기 때문이다. 조자르의 선견지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루브르 박물관 대표 소장품 10선을 소개한다.

①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이자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다. 피렌체의 돈 많은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와 결혼한 리자 게라르디니의 초상화로 조콘도의 부인이라는 뜻의 라 조콘다(La Gioconda)라고도 불린다. 16세기 초 조콘도의 주문으로 그린 이 그림은 수수께끼 같은 신비로운 미소와 눈썹이 없는 얼굴로 유명하다. 눈가와 입가에서 드러나듯 윤곽선을 손으로 문지른 듯이 연기처럼 흐릿하게 처리한 스푸마토(sfumato) 기법을 창안한 다빈치의 파격적인 실험정신이 오롯이 드러난 그림이다. 볼 때마다 신비감과 상상력을 부추기는 효과를 자아내는 것도 바로 이 스푸마토 기법 때문이다.

1911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도난 사건과 복원과정에서 지워졌다거나 화학반응에 의한 탈색이라는 논쟁을 둘러싼 논쟁, 그림을 주문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빈치 본인이 보관하다 프랑수아 1세 프랑스 왕의 수중으로 넘어간 점 등 술한 의혹과 애깃거리도 모나리자의 명성을 확고하게 만든 동력이다.

② '큐피드의 키스로 소생한 프시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큐피드가 죽음의 잠에 빠진 아내 프시케를 키스로 되살리는 모습을 신교전주의 양식으로 형상화한



이탈리아 조각가 안토니오 카노바(1757~1822)의 작품이다. 공주 신분으로 출중한 미모의 프시케는 큐피드의 어머니이자 미의 여신인 비너스(아프로디테)의 노여움을 샀다. 노여움의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자신보다 예쁜 인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프로디테는 큐피드가 프시케에게 화살을 쏘아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음모를 꾸미지만 막상 프시케를 본 큐피드는 눈부신 미모에 넋을 잃고 어머니의 뜻을 거슬러 결혼을 감행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프시케에게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당부였다.

그러나 호기심을 참지 못한 프시케는 결국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고 실망한 큐피드는 그의 곁을 떠나버린다. 큐피드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던 프시케는 어느 날 비너스의 계략에 넘어가 황금 상자를 열어본 뒤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된다. 상자 안에 죽음의 잠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안 큐피드가 프시케에게 달려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프시케를 살려낸다는 신화를 조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③ 고대 그리스 대표 조각상 '밀로의 비너스'

그리스 신화 속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표현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각상이다. 기원전 100년경 작품으로 추정되는 높이 203cm의 대리석 입상이다. 1820년 에게해의 밀로스섬에서 한 농부에 의해 두 팔이 없이 파손된 채로 발견돼 '밀로의 비너스'로 불린다. 작가는 미상. 이상적인 미의 전형인 황금비율(1:1.618)이 적용된 작품으로 콘트라포스토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조각 양식과 정교한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헬레니즘 조각 양식 둘 다 엿볼 수 있다.

콘트라포스토는 오른 다리로 무게중심을 잡고 왼 다리는 무릎

을 살짝 구부린 자세다. 인체를 S자의 곡선으로 비스듬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연출한 이 자세는 골반 부위의 관능미를 부추기고 생동감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특징이다. 흘러내릴 듯 하체를 덮고 있는 의상의 주름 묘사가 압권이다.

④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5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법치주의를 주창하며 높이 2.25m의 검은색 현무암 돌기둥에 새긴 법전. 법전 윗부분에 왕과 신이 만나는 장면이 부조로 형상화돼 있고 그 아래 몸통에 법전 내용이 새겨져 있다. 거의 40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법전 내용이 보존된 것도 재질이 튼튼하고 강한 현무암 덕분이다. 부조 오른쪽 인물이 바빌로니아의 태양신이자 정의의 신인 샤마시(shamash). 왼쪽이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건네받고 있는 함무라비 왕이다.



1901년 이란 서남부의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됐으며 설형문자로 된 서문과 본문 282개 조, 맺음말로 이뤄져 있다.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통일한 함무라비 왕이 국가 체제의 제도적 정비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성문법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잘 알려진 보복법 성격과 계층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 신분별 차등 징벌제, 일부 증거주의 원칙의 적용 등이 특징이다.



5



6

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 '니케상'

루브르 박물관 드농 관에 입장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맨 위 넓은 홀에서 우리를 반기는 조각상이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 일명 니케상이다. 니케는 그리스 신화 속 승리의 여신으로 기원전 190년경 에게해에서 벌어진 해전의 승리를 기념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니케가 큰 날개를 휘날리며 지중해에 떠 있는 뱃머리에 내려앉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1863년 프랑스 고고학자 샤를 샤푸아소가 에게해 북쪽 사모트라케 섬에서 100여 개의 흩어진 파편 조각들로 발견한 뒤 루브르 박물관으로 보내 3년간의 복원과 정을 거쳐 1879년 최초로 공개됐다. 얼굴도 없고 양팔도 없는 길이 328cm로 복원된 니케 상은 해풍에 휘감긴 옷자락 모양과 활짝 편 날개와 왼쪽 다리의 자세에서 기풍 당당하면서도 우아한 미가 돋보이는 헬레니즘 조각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 니케 상의 날개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로고의 모티브다.

⑥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신고전주의의 거장 자크 루이 다비드(1748~1825)가 나폴레옹 1세의 황제 즉위식 장면을 그린 그림. 3년에 걸친 제작 기간에 세로 621cm, 가로 979cm의 웅장한 크기였다 200명이 넘는 인물이 등장하는 초대형 작품이다.

1804년 12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된 대관식 장면은 나폴레옹을 영웅적으로 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황 비오 7세가 나폴레옹에게 왕관을 수여하는 게 아니라 나폴레옹이 황후 조세핀에게 왕관을 하사하는 방식으로 그려졌다. 나폴레옹의 키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 나폴레옹은 이미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의자에 앉은 교황은 뭔가 불만스러운 제스처

를 하고 있다. 교황 주위의 성직자들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왕관을 들고 서 있는 나폴레옹의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기품있는 모습으로 좌정한 여인이 보이는데 나폴레옹의 어머니다. 조세핀과 결혼을 반대한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실제 대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⑦ '목욕하는 밋세바 여인'

구약성경의 이야기 한 토막을 소재로 한 렘브란트의 그림. 심각한 표정으로 목욕 중인 여인은 밋세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부하의 아내인 그가 근심 가득한 이유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편지 탓이다. 편지에는 다윗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왕이 청혼했으니 어찌 걱정이 없을까. 다윗이 부하의 부인에게 프러포즈한 이유는 단 하나, 빼어난 미모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야외에서 목욕하는 일이 당연지사였다. 실내 목욕시설이 있을 리 없고 무더운 산악지대라 집 바깥 훨씬 노출된 곳에서 몸을 씻는 일이 일상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여자들의 알몸을

볼 수 있는 시대였다. 다윗도 우연히 밋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뒤 송두리째 마음을 빼앗긴 것이었다. 다윗의 계략에 따라 밋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의도적인 죽임을 당한 뒤 둘은 결혼해 아들을 낳는데 그가 솔로몬이다.



7

⑧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낭만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1798~1863)의 기념비적인 역사화. 1830년 7월 프랑스 국왕 샤를 10세의 기본권 제한 칙령에 반발해 일어난 시민혁명인 7월 혁명을 기념해 제작한 그림이다. 샤를 10세가 축출되고 루이 필리프가 새로운 왕위에 오르게 된 7월 혁명의 전선에 직접 가담하지 못한 들라크루아가 그림을 통해서라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 끝에 나온 예술적 산물이다.

프랑스 국기를 든 여신의 뒤를 따라 죽은 동지들의 시체를 넘으면서 진격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담았다. 삼각형의 구도로 그려진 그림으로 자유의 여신의 왼편에 총을 들고 있는 인물이 들라크루아 자신이다.

⑨ 낭만주의 그림의 효시 '메두사의 뗏목'

19세기 유럽 열강들의 식민 통치 시대에 벌어진 해상 참사를 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게 고발한 역작이다. 화가는 프랑스 낭만주의의 선구자 테오도르 제리코(1791~1824). 극한 상황에서 야만인으로 전락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을 떠올리게 하는 이 그림의 배경은 1816년 7월 2일.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 식민지인 세네갈을 통치할 원정 선단을 꾸리고 출항한 날이



8



9



5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 '니케상' | ©Lyokoi88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6 자크 루이 다비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캔버스에 유화, 621×979cm, 1805~1807 7 렘브란트, '목욕하는 바테바', 캔버스에 유화, 142×142cm, 1654

8 외젠 들라크루아,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캔버스에 유채, 260×325cm, 1830 9 테오도르 제리코, '메두사호의 뗏목', 캔버스에 유화, 491×716cm, 1818~1819 10 앵그르, '그랑드 오달리스크', 캔버스에 유화, 91×162cm, 1814

| ©wikipedia commons, public domain

다. 선단의 호위함인 범선 메두사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 위기에 빠진 가운데 승선한 400여 명 중 급조한 뗏목으로 밀려난 노예 등 140여 명이 12일 동안 표류 끝에 15명만 살아남은 아비규환의 현장을 영웅적 서사 없이 비극적으로 묘사한 낭만주의 그림의 효시다.

⑩ 관행 무시한 혁신 '그랑드 오달리스크'

자크 루이 다비드의 제자로 신고전주의 화풍에 현대 미술의 숨결을 불어 넣은 앵그르(1780~1867)의 대표작. 터키 황제 술탄의 은밀한 욕구를 밀실에서 충족시키는 여자 시종(侍從)을 뜻하는 오달리스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그림이다. 관례를 깨고 현실 인물이 모델로 등장한 점, 이슬람 황실 문화에 호기심이 분출했던 유럽 사회의 단면이 엿보이는 그림이다. 오달리스크를 알몸으로 내세워 관능미를 한껏 추켜세운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작 이 그림의 파문은 회화의 원리원칙을 신앙처럼 추종한 정통 고전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에서 시작됐다. 허리와 팔이 기형적으로 길고 뼈도 근육도 없는 것이 사람의 몸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앵그르의 생각은 달랐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해부학과 황금비율 등 관행적인 미의 기준을 무시하고 왜곡된 기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앵그르의 지론이었다. 앵그르는 혁신론자였다. ◎



● 박인권 문화 칼럼니스트

PIK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전 <스포츠서울> 문화레저부 부장과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팀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시와 사랑에 빠진 그림> <미술전시 홍보, 이렇게 한다>, 미술 연구용역 보고서 '미술관 건립·운영 매뉴얼' '미술관 마케팅 백서' 등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미래를 보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문. 조선시대 서울과 삼남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
| 수원문화재단



영화 <사도>는 아버지 영조(송강호)와 아들 사도 세자(유아인)의 갈등을 줄거리로 조선왕조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려낸다. 악화일로를 걷던 부자 관계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갈 한 자루를 던져주고는 자살을 종용하면서 파국을 맞게 된다. 영조는 자살을 거부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버린다. 빛 한 줄기, 물 한 모금 없는 뒤주에서 사도세자는 쓸쓸히 생을 마감한다.

훗날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소지섭)는 세자에 책봉되고도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한 아버지 사도세자가 감내한 고통의 시간을 어린 시절 온전히 목도하고 기억한다.

2000여 개에 이르는 조선 성곽 건축 가운데에서 백미로 꼽히는 수원화성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에서 첫 돌이 패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경기 양주 배봉산 초라한 땅에 버려진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조선 최대 명당인 경기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릉원을 조성하고 화산 부근에 있던 행정기관을 수원 팔달산 아래로 옮기면서 수원화성을 축성했다. 지금으로 설명하자면 신도시를 지으며 방어 목적으로 성곽을 조성한 것이다.

과학·건축·예술 접목된 독보적 건축물

1794년 2월 착공해 2년 6개월 만인 1796년 9월 완공된 수원화성은 성곽 전체 길이가 5.74km로 높이 4~6m의 성벽이 130ha의 면적을 에워싸고 있다. 조선시대 개혁 군주 정조가 당파정치의 근절과 왕도정치의 실현이란 구상을 담아 정치 중심 도시로 지은 곳이 바로 수원화성이다.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크게 다섯 가지를 등재 사유로 꼽았다. 첫째, 처음부터 계획돼 신축된 성곽이란 점 둘째, 거주지로서 읍성과 방어용 산성을 합해 하나의 성곽도시로 만들었다는 점 셋째, 전통적인 축성 기법에 동·서양의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 넷째, 기존 우리나라 성곽에 흔치 않았던 다양한 방어용 시설이 많이 첨가됐다는 점 다섯째, 주변 지형에 따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조성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수원화성 축성에는 정약용 등 실학자 여럿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실제 활차와 녹로(도르래), 거중기 등 신기술의 활용, 동서양 축성술의 접목 등 18세기 과학과 건축, 예술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수원 진입로에 있는 팔달문은 서울과 삼남지방(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관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과거시험을 치르러 상경하는 선비도,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 팔달문 인근에는 항상 사람과 물품이 넘쳐났다.

흔히 교통이 발달한 곳에 '사통팔달'이란 수식어를 쓰곤 한다. 사통팔달이란 말은 수원화성의 사대문 중 남쪽 문인 팔달문에서 유래했다. 수원 진입로에 있는 팔달문은 서울과 삼남지방(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관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과거시험을 치르러 상경하는 선비도,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 팔달문 인근에는 항상 사람과 물품이 넘쳐났다. 정조는 팔달(八達)의 의미를 '(인근) 팔달산 이름이 팔달이어서 문도 팔달이며 사방팔방에서 배와 수레가 모인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세계기록유산이 된 화성성역의궤

수원화성은 다른 성곽과 달리 등산화를 켜지 신지 않고도 도심을 탐방하듯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로 잘 정비돼 있다. 상공에서 수원화성을 내려다보면 41개의 문과 누(적의 동정을 살피려고 높이 지은 곳), 치(성곽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시설), 돈(높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 등이 하트모양의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수원화성의 사대문은 팔달문(남문)과 장안문(북문), 창룡문(동문), 화서문(서문)이다. 조선시대 건축에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같은 성문이라도 팔달문과 장안문은 창룡문과 화서문보다 한 단계 격을 높인 형태로 지어졌다. 창룡문은 동쪽을 지키는 신령한 청룡을 상징한다. '화성의 서쪽 문'이란 뜻의 화서문은 밖으로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서 주변을 감시하려고 높다란 서북공심돈을 함께 세웠다. 서북공심돈은 적의 동향도 살피고 공격도 가능한 시설로 수원화성에서만 볼 수 있다. 정조가 가장 만족스러워한 건축물 가운데 하



나라고 한다.

사실 수원화성을 이야기할 때 <화성성역의궤>를 빼놓을 수는 없다. 정조는 화성 축성의 사소한 과정까지도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명을 내렸고 그 결과물이 바로 1801년 간행된 <화성성역의궤>다. 화성 시설물의 그림과 설명이 상세히 담겨 있는 책인데 유네스코는 2007년 <화성성역의궤>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했다.

수원화성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훼손됐으나 축조 기록이 담긴 <화성성역의궤>의 존재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복원에 성공했다.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며 그 옛날 위기를 기회로 삼고 미래를 내다본 정조의 혜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

◀1801년 간행된 화성성역의궤에 실린 수원화성전도 | 한겨레



● 김정필
《한겨레》기자



후후 후루룩~ 배는 든든 추위는 거뜰

우 / 동

추위와 눈발이 세상을 푹푹 지배한지도 어언 두 달이 넘었다. 추위엔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 제격이고 또 후루룩 삼켜 온기를 채우기 좋은 데는 매끄러운 '우동'만한 것도 없다.

우동은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지만 지금 우리나라엔 우동 이름의 음식이 세 가지나 있다. 중화요리 우동(大滷麵)과 일본요리 우동(うどん) 그리고 우리나라의 분식 우동(가락국수)이다.

'같은 이름의 다른 음식' 우동이 한반도의 지루한 겨울에 '핫팩'처럼 따뜻하게 채워주니 든든하다. 그 유래나 이름이야 어쨌든 이 세 가지 맛좋은 국수는 저마다 다른 매력을 품어 먹는 이로써 씹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 우동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육수에 굵다란 면을 말아낸 음식이다. 여러 우동 중 값이 가장 저렴한 축에 든다. 간식의 이미지도 있다. 포장마차나 분식집에서 출출할 때 허기를 때

우던 서민 음식이 바로 가락국수, 즉 한국식 우동이다. 일제가 물러난 후 우동은 남았지만 이름은 사라졌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우동을 '가락국수'로 순화했다.

1970년대 정부의 혼분식(混粉食) 장려 운동에 힘입어 값싸고 배불리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가락국수는 널리 퍼져갔다. 기차를 탈 때 대전역에 5분 정차하면 열려 뛰어내려가 사 먹던 음식도 바로 가락국수다.

주로 마른 멸치와 어묵꼬치를 넣고 끓여낸 시원한 국물에 통통한 우동을 말아낸다. 그 위에 고춧가루, 쫄갓, 유부, 김가루를 뿌리면 조리가 끝났다. 반찬도 고명도 필요 없었다. 특별한 우동을 원하면 어묵꼬치를 하나 찢어넣고 단무지 몇 개를 얹어주면 됐다. 먹는 이도 편했다. 후후 불어 후루룩 가락을 집어 입안에 욱여넣고 훌훌 국물을 마시면 끝이다.

처음엔 포장마차나 시장통, 분식점 모두 맛이 비슷했다. 나중엔 계란 하나를 깨 넣어주는 곳도 생겨나고 꽤 괜찮은 어묵을 올리는 집도 인기를 모았다. 김치를 썰어넣고 처음부터 전골



우동카텐 眞蘭うどん

주로 마른 멸치와
어묵꼬치를 넣고 끓여낸
시원한 국물에 통통한
우동을 말아낸다.
그위에 고춧가루, 썩갠,
유부, 김가루를 뿌리면
조리가 끝났다. 반찬도
고명도 필요 없었다.



●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식으로 끓이는 집도 있고 보글보글 끓는 돌냄비에 담아낸 우동도 한때 유행처럼 번졌다.

탱탱한 씹는 맛이 좋은 덕에 우동은 '사리'로도 인기를 모았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고 값까지 부담없으니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어 좋았다. 덕분에 라면 중에도 '우동맛'이 끊이지 않았다. 국물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동 국물에 밥을 마는 일도 예사다. '우동 정식'이라니 중국이나 일본 어디에도 없는 엄연히 독자적 식문화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중국 우동은 푸짐한 식재료와 고명을 올렸다. 오랜 시절부터 중국집에서 주요 메뉴로 올렸다. 일제강점기 근대소설에도 등장할 만큼 일찍이 대중화된 메뉴였다. 짜장면과 함께 식사부(중국집 메뉴판에는 요리부와 식사부가 있다)의 '투톱'이었다. 당시 중국집 주력 메뉴엔 감히 짬뽕이 끼지 못했다.

우동이라 쓰지만 따루미엔(大瀾麵)이라 읽는다. '소금 간을 한 국수'란 뜻이다. 청요릿집 시절부터 우동의 이름을 가져다 붙였다. 한 끼 식사로 충분한 든든한 고명에다 달걀을 풀어 부

전국의 우동 맛집



★창원 만미정 창원시 마산 구도심에서 돌냄비우동으로 오랜 시간 인기를 끌어난 집이다. 허름한 분식점 분위기지만 곳곳에 노포의 기품이 서려있다. 보글보글 끓는 돌우동은 시원한 국물

에 쫄깃한 면, 그리고 쫄쫄한 어묵에 대추, 맛살, 밤까지 든 고급 우동이다. 달걀을 풀어 고소한 맛을 내는 국물을 싹 비우고 나면 추위가 두렵지 않다.



★서울 종로 안래홍 서울 종로에서 오래 영업한 화상 중화요리집. 부드럽고 푸짐한 우동을 판다. 해물을 우려낸 새하얀 국물은 담백하지만 그안에 뭔가 입맛을 끌어낸다. 양파도 아삭하고

오징어도 질기지 않다. 탱탱한 목이 버섯과 쫄깃한 홍합살, 부드러운 애호박이 먹는 재미를 더한다. 국물을 주욱 들이켜고 나면 땀이 속이 편해지는 것이 웬지 하얀색 국물의 매력 같다.



★서울 합정동 우동카텐 여러가지 정통 일본식 우동을 맛볼 수 있다. 저염 명란을 쓰고 청어조림, 모시조개 등을 올리는 등 방문하는 순간, 우동의 신세계가 열린다. 고명과 면발은 우동 종

류에 따라 모두 다른 조합이다. 고명과 국물의 유무에 따라 이에 어울리는 면 두께가 있다. 국물도 제각각이다. 과연 전문점이다.

드럽고 고소한 육수가 강점이다.

일본 음식 중 가장 우리의 입맛에 친숙한 음식이 우동이다. 일본에선 그 원류를 중국의 훈련(饅飩)에서 찾고 우동(うどん)으로 전해왔다. 일본 우동은 종류가 많은데 맑은 장국에 두꺼운 삭면(削麵)을 쓴 국물 우동(가게우동)이 국내에선 가장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동을 먹을 때 국물 맛을 제일로 치고 일본인들은 면의 맛(매끈함과 쫄깃함)을 우동의 본 맛으로 해석한다. ◎

공감
리뷰



639호 '김병수의 마음 탐구'를 보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진주를 품은 조개 하나를 건네받은 거야'라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 좋은 것이 전부 좋은 것도, 나쁜 것이 전부 나쁜 것도 아니니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거지요. '살이 비극일지라도 삶의 최선의 자세는 하루하루를 용감하게 살아내는 것'이라는 문구도 좋습니다.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지만요. 그럼에도 주위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 변할 수도 있겠지요.

김숙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640호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공감>을 접했는데 유익한 정보와 훈훈한 이야기가 가득해서 좋았습니다. 특집 '환경 살리고 주민 의식 높이고'에서 구체적으로 충북 청주 한 아파트의 실천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이용 방법까지 있어서 유익했는데 다음에는 실제로 일상에서 포인트를 쌓아가는 사례를 보여주면 선한 자극과 동기부여가 될 거 같습니다.

조성진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사진
공감



빙글빙글 돌아가던 물레방아가 한파로 쫄쫄 얼었지만 이 순간에도 봄은 오고 있듯이 2년 넘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곧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의 봄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임인년이 되길 바랍니다.

김은미 경북 경산시 대학로8길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공감 gonggam.korea.kr

f www.facebook.com/wegonggam

www.instagram.com/we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 content.v.kakao.com/3094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post.naver.com/mcst_pr

blog naver.com/mcst_pr

ridibooks.com

digital.kyobobook.co.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23일까지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티콘(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 2022.1.1.~2022.12.31. 적용



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 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③ 해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및 환산액 기준)이내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최저임금 및 환산액 기준)이내

→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이후 3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04년부터는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근부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근부 산입)

※“최저임금 일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휴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일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휴휴 8시간×305+7+12월=약 209시간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1,914,440원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건청취 필요



0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져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0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05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어떻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6.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0만원 지원)

발급기간 2022년 2월 3일 부터 2022년 11월 30일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재충전) 안내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 자동재출전이 되지 않거나, 신규로 신청할 경우 아래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해주세요.

※ 카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발급 / 재출전 가능



가려운 주면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신규발급 / 재출판 가능



누리집
만 14세 이상,
본인연출수단 소지자

www.mru.or.kr → 상담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신규발급 / 재출전 가능



고바일 엠
만 14세 이상,
보안인출수단 소지자

문화누리 모바일 앱 → 상담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자율권



전화 ARS
만 14세 이상,
본인연결수단 소지자

무효기간 23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 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별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주민생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스포츠간접이용권(sporter.ksp.or.kr) | 장애인스포츠간접이용권(divoucher.ksp.or.kr)도 사용해 보세요.